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1994. 2. 28.

崔 春 欽(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硏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要　　約

Ⅰ. 序　論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붕괴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政策變化를 誘導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開放政策을 채택하도록 하고, 심각한 地域不安 요인이 되고 있는 核問題에 대한 透明性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남한에 대한 경직된 자세를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의 대북한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에 따라 중·북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分析·展望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첫째,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가속화하고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1년 이후 중국의 대북한정책을 軍事·安保 및 經濟分野로 나누어 分析·檢討하고, 둘째, 중국의 대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中·北韓關係를 단기 및 중·장기별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1. 中國의 國際秩序 認識

1989년 천안문사태와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美軍事力 감축으로 향후 국제안보질서가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를 주축으로 하는 3極體制로 정착되어 1980년대 중반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不安定 등으로 인해 당분간 미국이 唯一 超強大國으로 군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政治·軍事的 役割增大를 모색하고자 하는 일본을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냉전시대 잠재해 있었던 국가간의 영토분쟁, 인종분규 및 종교갈등 문제 등이 域內紛爭 誘發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내부의 과격한 분리·독립운동이 자국의 안보환경 유지에 不安要因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 韓半島政策 基調

198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한반도정책 基調는 韓半島 安定維持, 韓國과의 經濟協力 增大, 對韓半島 影響力 增大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을 촉구하고 周邊強國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牽制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技術水準(중간기술 보유 등)과 도입조건이 일본에 비해 장점을 많이 具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도 相互補完性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

대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가 중국과 隣接하고 있으며 중국의 안보·경제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占하고 있는 바, 중국은 역내 강국과의 관계증진을 沮害하지 않는 선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維持·擴大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관계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적 협력을 모색하고 북한과는 기존의 政治·軍事的 紐帶關係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Ⅲ. 冷戰以後時代 中國의 對北韓政策

1. 軍事·安保政策

냉전체제 붕괴라는 시대상황적 요인과 중국의 대내외적 필요에 입각하여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이념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게 되고, 주변정세 안정유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주변국에 대해 軍事·安保政策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무기 제공을 점차 축소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간접적이나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접경국 북한이 지니는 戰略的 價値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軍事支援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노선

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經濟政策

중국은 북한의 經濟難이 지속되어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혼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북한 경제가 世界經濟體制에 編入되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서방관계를 위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經濟改革·開放政策을 통한 외국자본 도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무역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원유수출시 우호가격제를 폐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무역정책을 現實主義的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 방식에 의한 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 자체의 에너지난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으로 인하여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不利益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Ⅳ. 中·北韓關係 展望과 韓國의 考慮事項

1. 中·北韓關係: 持續과 變化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紐帶關係를 持續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들로서는 한반도의 안정유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

지, 중국의 대내 정치적 고려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變化시키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북한의 戰略的 重要性의 相對的 減少; 韓·中關係改善 등을 들 수 있다.

2. 中·北韓關係 展望

이상 분석한 바를 토대로 하여 볼 때, 中國의 對北韓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의 경제난 가중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점차 증대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을 止揚하고 북한을 國際社會에 參與하도록 설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미·러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쌍무적이며 강대국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변방국과의 善隣友好關係 유지차원에서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중·소 북한 삼각체제 속에서 나타난 중·소분쟁에 대한 단순한 對應的인 政策에서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한 目標志向的인 정책으로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해서 북한과 최소한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지지입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은 安保的 利益보다 經濟的 利益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북한 관계에서 短期的으

로는 持續要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나, 長期的으로는 경제적 실리에 따른 變化要因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韓國의 考慮事項

韓國이 취하여야 할 政策代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 중·미관계의 진전에 구애 받지 않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對中外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 중·미관계 변화와 관계없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내 親韓派 지도자들과의 교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중국 개혁파들의 정책결정이 크게 작용한 점을 유의하여 중국 改革派와의 紐帶關係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군부와의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과 연계하여 중·북한 동맹조약중 중국의 自動軍事介入 의무에 대한 엄격한 適用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와 관련, 한국의 대중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 공동합작 및 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相互補完性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중국의 동북부지역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北韓進出의 교두보로 삼아 대북경협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개발사업 등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한국의 대북한 영향력 구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를 위해 북한의 외환사정 등 經濟難을 고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및 차관 등을 제공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제삼국들과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目　　次

Ⅰ. 序　論 …… 1

Ⅱ.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3

1. 中國의 國際秩序 認識 …… 3
2. 韓半島政策 基調 …… 6

Ⅲ. 冷戰以後時代 中國의 對北韓政策 …… 11

1. 軍事·安保政策 …… 11
2. 經濟政策 …… 20

Ⅳ. 中·北韓關係 展望과 韓國의 考慮事項 …… 29

1. 中·北韓關係: 持續과 變化 …… 29
2. 中·北韓關係 展望 …… 37
3. 韓國의 考慮事項 …… 40

參 考 文 獻 …… 43

Ⅰ. 序　論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은 傳統的 紐帶關係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양국 지도자간 유대관계, 이데올로기의 연대성, 안보전략적 고려 및 경제적 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6년부터 전개된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의 對中國 和解政策 추진으로 中·蘇關係가 改善되고 1990년 9월 소련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중·소의 대북한 경쟁관계, 소위 '北方三角構圖'가 瓦解됨에 따라 중·북한 관계는 疏遠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소련 붕괴이후 美, 日, 中, 러 4強關係 變化와 韓·中修交는 중·북한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政策變化를 誘導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고, 심각한 지역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核問題에 대한 透明性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남한에 대한 경직된 자세를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의 대북한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에 따라 중·북한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分析·展望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첫째,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가속화하고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1년 이후 중국의 대북한정책을 軍事·安保 및 경제분야로 나누어 分析·檢討하고, 둘째, 중국의 대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북한 관계를 단기 및 중·장기별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1. 中國의 國際秩序 認識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중국은 주변환경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대미 데탕트정책으로 인해 미·소간 전쟁위협이 감소되어 동북아에서도 미·소간의 충돌이 惹起될 가능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가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看做, 소련과의 關係正常化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1989년 천안문사태와 1992년 구소련 붕괴이후 전개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소련의 붕괴와 미·러간의 지속적인 데탕트로 인해 미·소가 구축해 놓은 냉전체제가 瓦解되고 냉전이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냉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도 不確實한 要因과 不安定 要因이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美軍事力 감축으로 향후 국제안보질서가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를 主軸으로 하는 3極體制로 정착되어 1980년대 중반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으

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통상마찰, 인권개선, 환경오염 및 핵무기확산문제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해결을 主導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1] 또한 중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政治·軍事的 役割增大를 모색하고자 하는 일본을 경계하고 있다.

동북아질서와 관련, 러시아내부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대외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은 短期的으로 中·美·日 3角關係로, 長期的으로 中·美·日·러 4角關係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아울러 중국은 냉전시대 잠재해 있었던 국가간의 영토분쟁, 인종분규 및 종교갈등 문제 등이 域內紛爭 誘發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내부의 과격한 분리·독립운동이 자국의 안보환경 유지에 불안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臺灣 民進黨(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의 '臺灣獨立' 요구, 소련 붕괴이후 티베트에서 過激國家主義者와 分離主義者가 주동하고 있는 '티베트독립' 요구,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이슬람原理主義者'들의 과격 독립운동 등이 역내 불안을 조성할 것으로

---

1) 李鵬 中國總理의 第8期 全人大「政府工作報告」,「文匯報」, 1993. 3. 17.

2) Ji Guoxing, *Post-Cold War Pacific Asia: A Chinese Perspective*, (Shanghai, PRC: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No. 2, May 1992, p. 18.

예상하고 있다.[3)]

세계경제질서와 관련, 중국은 미국경제의 현저한 약화로 인해 세계경제질서 역시 미국·서구·일본을 軸으로 하는 多極化 現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간 상호경쟁과 의존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가간의 상호경쟁은 경제블럭화 현상, 보호무역주의, 과학과 기술향상 문제 등에서, 상호협력은 국가간 무역불균형 시정, 환경보호문제, 마약통제 문제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국가간 상호협력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마지막으로, 중국은 각국의 科學·技術水準이 향후 국제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국가간 경쟁은 냉전시대의 군사력 우위에 의한 경쟁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정치, 과학·기술, 군사력 등의 역량과 영토, 지리, 인구, 자원 등 각종 요소들의 종합적인 실체인 「綜合國力」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력 등 종합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

3)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XXXIII, No. 3, March 1993, pp. 238~39.

4) 陳小攻, "世界正處在重要的過渡時期," 「世界知識」, 1992年 第1期, p. 5; 黃素庵, "世界經濟格局新變化,"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p. 183~209. 또한 중국은 선진국들로부터 기술과 자본 등의 도입을 위해서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방된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심화한다면, 선진국들이 중국의 거대한 市場을 중시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력하고 있다.[5] 이와 관련, 중국은 경제발전에 유리한 對內外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리지향적인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있다.[6]

2. 韓半島政策 基調

중국은 주변강국인 미국, 소련 및 일본과의 관계와 4개현대화의 성공적 달성을 고려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은 주변 강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이념의 차이와 관계없이 주변국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獨立自主的 平和外交」, 周邊國과의 善隣關係 增大, 「全方位外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主權尊重, 內政不干涉 등 「平和共存 5原則」에 입각하여 대외관계를 설정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유지·제고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7]와 1993년 3월 제8기 全人大 1차회의를[8] 통

5) Qimao Chen, pp. 238~39.

6) 중국이 대외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압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천안문사태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오랜 기간 지속되자, 중국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고수에 집착하게 되었으나, 서방의 대중국 압력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구를 실리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Robert G. Sutter, "China in World Affairs: Background,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October 1, 1992, pp. 9~10.

7) "江澤民在中共14大的報告," 「文匯報」(香港), 1992. 10. 21; 「人民日報」,

해서도 중국은 「平和共存 5原則」이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계속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平和共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로서는 소련붕괴이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들이 人權問題, 무기수출문제, 영토문제 등을 빌미로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정치개혁 압력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9]

또한 중국은 주변국과의 善隣關係 增進을 대외정책 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만이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첩경이

1992. 10. 21; 周煦,"十四大後的中共外交政策: 持續與改變," 「中國大陸研究」(臺北), 第36卷, 第1期(1993年 1月), p. 55.

8) 李鵬 中國총리는 1993년 3월 第8期 全人大 「政府工作報告」에서 중국외교의 5대 기본지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 발전시키며, 주변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평화와 안정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발전도상국과 우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하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 보호하고 지역간의 충돌과 국가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文匯報」, 1993. 3. 17.

9) 1992년 하반기의 중·미관계는 더욱 소원한 관계였다. 이는 미국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GPALS)에의 일본 참여 요청 등으로 미·일간의 전략협조 관계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북한과 함께 국내정치 개혁 進展不在를 이유로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완화 對象에서 제외(1992. 7. 24)하고 중국의 對이란 원자로 판매 및 핵기술 협력을 비난하는 등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자세를 견제하였기 때문이다. 「產經新聞」, 1992. 7. 23; "Tossing A Rocket At China," *Time*(September 6, 1993), pp. 20~21, David Shambaugh,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ival*(Summer 1992), pp. 93~96.

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지도부는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외교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1990년대초 이래 중국은 독립국가연합, 이스라엘, 인도, 베트남 및 한국 등과 외교관계를 正常化한 바 있다.[10]

아울러 중국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실리와 경제를 중시하는 「全方位外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와 군사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천안문사태 이후 疏遠해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난 10여년 동안 축적된 경제력 등 국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남미 등 과거 비교적 疏遠하였던 지역에 대해서도 외교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대외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안정유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모색을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

10) 중국은 라오스와 변경문제(1992. 1), 러시아와는 중·러 동부변경지역(1992. 3)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였고 이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과 변경문제 해결에 대한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중·인도간 및 중·베트남간의 변경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楊尙昆 중국 국가 주석의 몽고방문(1991. 8. 26~8. 29)을 시작으로 중국은 이스라엘, 독립국가연합, 인도와의 수교, 베트남과의 정상화 및 수교(1992. 2. 11)를 달성한 것이다. Liu Huaqiu, "China's Diplomatic Achievements in 1992," in *FBIS CHI* (1993. 1. 15), pp. 3~6; 이붕 중국총리는 중국총리로서는 21년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다(1992. 11. 30~12. 4); *Beijing Review* 52 (28 Dec~3 Jan 93), pp. 8~11.

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안정유지 모색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을 촉구하고 주변강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牽制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한간 평화공존이 지속되어야 하고, 한반도에 대한 주변강국의 霸權行爲나 強權政治를 排除함으로써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한국의 기술수준(중간기술 보유 등)과 도입조건이 일본에 비해 장점을 많이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相互補完性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중국 東北3省과 東海를 연결하는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東北3省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국이 두만강을 경유, 일본해로 진출하여 일본의 對中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정책 고수로 북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다. 한반도가 중국과 隣接하고 있으며 중국의 안보·경제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바, 중국은 역내 강국과의 관계증진을 沮害하지 않는 선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관계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적 협력을 모색하고 북한과는 기존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Ⅲ. 冷戰以後時代 中國의 對北韓政策

1. 軍事·安保政策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구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감소되는 등 중국의 대외환경이 개선되고,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심화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안보지원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라는 시대상황적 요인과 중국의 대내외적 필요에 입각하여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이념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게 되고, 주변정세 안정유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주변국에 대해 軍事·安保政策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무기 제공을 점차 축소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간접적이나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접경국 북한이 지니는 戰略的 價値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군사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노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 軍事支援 縮小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고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국과 북한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軍事支援은 감축될 수 밖에 없었다.

한·중수교 직후 북한이 중국측에 항의각서를 보내고 「중·조 우호협력조약」 파기위협, 駐中 북한대사 소환 등을 통해 중국측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중·북한관계가 불편하게 되었다. 중·일관계 발전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 중단 등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1961년의 軍事同盟條約중 자동개입 조항에 대해 엄격한 적용과 군사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던 사실은 중국의 대북한 군사지원 필요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역내 안정을 바라는 중국은 북한의 군사지원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았다.[12]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1992년 12월초 약 3조 7500억원에 달하는 대중외채 상환 요구를 거부하고 12월말부터 對中國接境地域을 통제할[13] 정도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중·북한간 안보관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특히 1993년초 북한이 중국에게 남한측의 돌연한 北侵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무기 및 군사장비의 제공과 석유, 기계,

11)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을 방문(1993. 1. 30~2. 1)하여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중 자동군사개입조항의 해석을 제한하는 각서를 교환하고 북한에게 공격용 무기를 포함, 군사장비를 외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일보」, 1993. 2. 9.

12) 「鏡報」, 1993年 6月號.

1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3. 4. 13, p. 5; 북한측은 등소평, 양상곤, 강택민 등 중국 최고지도층을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고 홍콩의 시사월간지 「鏡報」 1993년 3월호가 보도하였다.

식량원조 등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북한에게 새로운 정치·경제·군사협정체결과 군사지원 요청은 불가능하며 다만 국내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경제지원을 공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더욱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1993. 3. 12)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해온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져 中·北韓間의 關係는 더욱 긴장되었다.[15]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관련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모두 만족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북한에게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책자세를 더욱 예측불허하게 하였다.

북한은 북경에 특사를 파견하여 강택민 당총서기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江澤民 중국당총서기는 면담을 거절하고 대신 政治局員겸 中央黨 宣傳部長 丁關根과 前副總理 吳學謙을 김일성의 특사에게 보내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양국 인민관계 및 양국 정부관계를 손상치 않기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내부공격과 중국 공산당 및 중국정부를 비방하는 宣傳活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14) *Ibid.*, p. 5.

15) 북한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약 2주간 중·북한국경을 봉쇄하였고, 중·북한 국경지대에서 42차례에 걸친 발포사건으로 중국병사 2명과 주민 3명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鏡報」, 1993년 6월호; 「世界日報」, 1993. 6. 5.

또한 중국은 북한특사에게 북한노동당대표단과 군사대표단의 1993년도 방중초청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북한과의 정치·군사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16]

이와 관련,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1993. 4. 9)과 함께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막바지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1993년 김일성의 81회 생일축하행사에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불만표시로 고위사절단 대신에 두팀의 예술단만을 보냈을 뿐이다. 이는 1992년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이 김일성의 생일축하사절단 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17]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이 가지는 전략가치를 고려하여 軍지도자 북한 방문 등을 통해 군사·안보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楊尙昆(군사위 상무부주석), 楊白氷 중앙군사위 비서장의 軍職박탈 등 중국군부 인사개편이후[18] 중국은 1992년 10월 군총참모부 裝備一軍代表團(團長 裝備部長 賀鵬飛 少將), 한국전 참전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단장 海軍정치

16) 「鏡報」, 1993년 6월호; 「한국일보」, 「朝鮮日報」, 1993. 6. 6.

17) *Korea Herald*, 1993. 4. 16, p. 4; 이번 김일성의 생일축하행사는 1992년의 호화판 생일축하와는 현저히 다르게 거행되었다.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방문은 없었으며 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장인 야세르 아라파트의 축하화환만을 받는 정도 뿐이었다.

18) *FBIS CHI*, 1992. 12. 1; Michael D. Swaine, *The Military &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Leadership, Institutions, Beliefs* (Santa Monica, CA: RAND, 1992), p. 195. 10월 18일 중공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楊尙昆과 楊白氷의 軍職을 剝奪하는 한편, 遲浩田 軍총참모장을 신임 국방장관에, 濟南軍區司令員인 張萬年중장을 軍總參謀長에 각각 임명하였다.

위원 위금산 中將) 및 인민지원군영웅대표단 中將 류지전) 등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재선 북한 인민군부참모장을 북경에 파견(1992. 11. 24~12. 2) 신임 중국군 총참모장 張萬年중장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 등장한 중국 군부와의 친선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19]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1993년 후반기부터 북한을 위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胡錦濤 중공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1993. 7. 26~7. 29) 위시, 10개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김정일 승계체제 지지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지속을 다지고 있다.[20]

나. 北韓의 核武器 開發 反對

중국은 냉전시대 한반도비핵화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1991년 부시 미대통령의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철수 표명이후 한반도비핵화를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은 무력적 방법보다는 관련 당사국간 협의와 관계개선을 통한 방법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1년 부시 미대통령의 한반도 戰術核 撤收表明과 한국의 「한반도비핵화 5원칙」선언을 지지하고 동년 12월 남·북

19) 「內外通信」(종합판 46), 1993, pp. 185~86.

20) 「內外通信」(종합판 49), 1993. 7~9, pp. 101~104; 胡錦濤는 訪北직전 중국 丹東의 「抗美援朝記念塔」준공식에 참석, 중국의 韓國戰참전 사실을 정당화한 바 있다.

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이 지지하는 한반도비핵화는 한국, 북한, 혹은 한반도내의 외국군대 등 누구의 통제하에 있든지간에 한반도내에서의 핵무기 부재를 추구하고, 남북한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등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보 및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와 1,000킬로미터 사정거리를 가진 勞動 1號 미사일 등 공격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이를 구실로 일본, 한국 등이 핵무기 보유를 서두르게 되면, 중국이 향유하였던 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행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域內 군비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역내안정은 물론 중국의 안보유지 노력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방관할 경우, 중국은 한·미·일·러·서구 국가들의 비난과 함께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차질을 빚게 되어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비준·발효(1992. 1)시킴에 따라, IAEA와 북한의 협상과 남북한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한 상호사찰의 조속한 성사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한반도에서의 核不

在를 거듭 촉구하였다.[21] 또한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확산 금지조약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핵기술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고위층의 북한방문을 통해 NPT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였다.[22]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은 1992년 4월 김일성생일 축하차 북한을 방문, 김일성과 2차에 걸친 회담을 가졌으며 동년 6월 楊白氷 중국군 총정치부 주임이 북한을 방문(1992. 6. 4~6. 11), 오진우 북한군 사령관 및 이봉원 북한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함께 판문점과 西海岬門을 방문하여 남·북한 대치상황을 둘러 보는 등 북한이 처한 안보상황을 시찰한 바 있다.[23]

1993년 IAEA의 사찰 결과 IAEA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說得하였다. IAEA가 북한핵사찰 결과 북한이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음을 지적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의혹이 增幅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투명성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핵개발

---

21)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993년 2월 18일 주례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핵보유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만 한반도내의 외국군대라고만 언급하였다. *Xinhua*, 1993. 2. 18; *FBIS CHI*, 1993. 2. 18.

22) 「內外通信」(종합판 46), 1993, p. 73; 「內外通信」(종합판 45), 1993, p. 51, p. 64.

23) 「內外通信」(종합판 45), 1992, pp. 168~69; 양상곤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상은 "전체 조선인민들의 근본이익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유리하다"고 북경방송이 4월 19일 보도하였다.

의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24] IAEA의 특별핵사찰 거론은 사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구실로[25] NPT에서 탈퇴(1993. 3. 12)하였다. 북한이 NPT를 탈퇴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을 隱蔽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IAEA는 사실상 북한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북한의 핵사찰거부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강제사찰을 실현할 것임을 表明하였다.

북한의 NPT탈퇴와 관련, 한·미·일은 북한의 NPT탈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북한의 NPT탈퇴 철회, IAEA의 특별사찰, 남북한 동시사찰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26] 이에 대해, 중국은 한·미·일과 기본

---

24) 朱昌俊 주중국 북한대사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이 남한내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이며 남한 역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남한의 이러한 의도는 「남·북한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아시아국가들의 평화와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하였다. "DPRK Envoy on ROK Nuclear Development," 중국 북경국제방송(한국어), 1993. 2. 5; *FBIS CHI*, 1993. 2. 8.

25) 한국과 미국은 1992년 10월 7~8일간 워싱톤에서 제24차 한·미연례 안보회의에서 남·북한간의 핵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26) 「中央日報」, 1993. 2. 11, p. 9; 그러나,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회 크로 위원장을 비롯해 스칼라피노교수, 셀릭 헤리슨 카네기연구소 수석연구원, 윌리엄 테일러 미국제전략 문제연구소 부소장은 1993년 1월 15일 북한 핵문제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를 沮止

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다.[27] 중국은 북한이 NPT 탈퇴 철회를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가 추가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의안에 기권하여 북한의 입장에 간접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게 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회담(1993. 7)을 통해 북한 핵사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체제유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NPT탈퇴를 유보하는데 동의하는 댓가로 IAEA의 공정한 適用原則과 미국의 對北韓 武力不使用이나 불위협의 보장, 주권의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미국이 이를 수락하였다.[28]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의 IAEA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 수용이 미·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만일 북한이 제네바회담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北韓 核問題를 안보리에 다시 상정하여 제재조치를 모색할 것인 바, 제재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IAEA와 북한 및 북한과

하기 위해 強制査察인 특별사찰의 원칙을 고수하되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南北韓 相互査察이 아닌 신축성있는 국제사찰를 통해 시도하고,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도 납득할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제사찰을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하였다. 「世界日報」, 1993. 2. 1.

27) 安秉俊, "韓中修交 1年의 回顧와 展望," 「中國硏究」, 제1권 3호 1992, pp. 9~11.

28) 미·북한 접촉관련 미국무부 설명자료. 1993. 7.

미국간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나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 논의가 진행될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에 기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특별 핵사찰거부 및 NPT 탈퇴에 따른 대응방안을 안보리에서 논의한다할지라도 NPT 규정상 탈퇴를 선언한 국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對美 修交와 미국과의 경제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북한 핵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29] 중국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절실할 것이므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經濟政策

가. 北韓의 改革·開放 誘導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북한에게 군비축소,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통한 외국자본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다. 중국이 북한의 개방을 적극

29) 1993년 6월 民族統一研究院과 중국의 現代國際關係研究所간의 韓·中 워크샵에서의 中國측의 주장.

권유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북한이 막대한 국방비 지출 때문에 經濟難이 加重되어 체제를 유지하기가 점차로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과다한 국방비 부담을 덜게 되면 경공업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이 생겨 경제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북한경제가 世界經濟體制에 편입되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서방관계를 위해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中國은 北韓이 中國과 締結한 여러가지의 경제협력 약속(경화결제 시일 약속 등)을 시기에 맞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북한 經濟政策의 구조적인 폐쇄성에 의한 외환보유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자국의 경제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이다.[30] 중국은 길림성 圖門地區가 러시아 및 북한과 맞닿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海와 15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잇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두만강 유역의

30) 중국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속도가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발전속도를 초과하고 있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개방된 지역경제권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Chen Jingbiao, "Asia-Pacific Economic Ties Grow Closer," *Beijing Review* (February 8~14, 1993), p. 8.

경제교류에 적극 관심을 표명, 강하류에 있는 훈춘을 경제특별구로 지정하고 최하류에 있는 防川에 항만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두만강 항해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려 하고 있다.

1992년 2월 비준된 중·러 東部國境線協定에 의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두만강 항해권을 행사하는데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31] 이는 북한이 중국의 계획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羅津, 先鋒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중국의 경제협력을 유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北韓은 中國의 對北韓 經濟支援 대가로 1993년 3월 중국과 두만강개발 관련 쌍무협정(1993. 3. 19)과 청진항 공동개발·이용협정(1993. 6. 11)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중국측은 청진항과 회령－청진간의 도로건설에 투자한 비용을 북한측으로부터 회수한 이후에도 5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나진 선봉지역의 개발합작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32]

나. 對北韓 交易方式 現實化 要求

蘇聯 崩壞以後 중·북한간 무역에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첫째, 중국이 북한에게 무역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원유수출시 우호가격제를 폐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무역정책을 현실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둘째,

31) 平松 茂雄, "中國海軍と「中華世界」の再興," 「新防衛論集」, 20, 3(1992. 12), pp. 34～35.

32) 「世界日報」, 1993. 7. 7, p. 8; 월간 「북한동향」, 통일원, 1993. 6.

中國의 對北韓 貿易黑字로 중국상품의 북한 수출액이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셋째, 러시아의 대북한 무역액 감소로 인한 중·북한간 무역액의 증가로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되고 있는 점이다.

1991년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를 실시하고 경제원조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1991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율이 전년도의 -3.7%보다 더욱 낮은 -5.2%를 기록하는 등 北韓經濟의 沈滯局面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33] 그러나 중국은 자국경제 발전을 우선시하여 1992년부터 「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에 의한 교역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對外開放을 확대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한과 바터무역방식의 교역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가격을 점차 國際市場價格으로 현실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북한경제가 침체될 경우 북한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

33) 統一院, 「統一白書, 1992」, p. 375; 미국의 스칼라피노교수가 主導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치명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난은 구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인한 것이며 5년안에 파탄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스칼라피노교수 등은 식량난은 공급부족에서 보다는 분배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는 바, 북한에게 원유 및 석탄 등의 에너지부문에 대해 부분적인 경화결제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량을 감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2년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액중 약 9,700만달러에 대해서는 경화결제를 유보하고 나머지 약 4,000만달러에 대해서만 경화결제를 요구한 셈이다.

〈표 1〉 연도별 북한의 대중국 원유도입 추이

(단위: 천톤)

구 분	'88	'89	'90	'91	'92
원유도입량	1,202	1,073.5	1,062.6	1,101.9	1,005.6
단가(미$·톤)	–	60	58	126	137

출처: 무로오까 태츠오, "타협할 수 없는 중국·북한 경제관계," 「중국경제」, 1992년 3월호.

만일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화결제를 실시할 경우, 中·北韓 교역총액의 20%~30%(약 3억달러)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변경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청산계정에 의해 운영되어 온 절반 수준의 양국 정부간 교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써,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유, 석탄, 코크스, 軍需關聯 物資 등은 북한의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어 북한의 경제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34]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북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경화결제 방식의 교역을 채택하도록 요구

34) 「國際問題」(서울), 1993. 7, pp. 132~33.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원유 등 북한에 대한 수출품 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 2〉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中·北韓間 交易關係를 놓고 볼 때,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북한의 총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의 23.6%에서 1992년에는 28.2%로 증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5]

〈표 2〉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교역액

(단위 : 천달러)

국 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 출 입 계	
	'91	'92	'91	'92	'91	'92
중 국	85,670	155,463	524,780	541,107	610,450	696,570
일 본	283,54	257,393	223,993	222,894	507,567	480,287
CIS	171,018	65,200	193,725	227,100	364,743	292,300
이 란	100,000	120,000	115,000	140,000	220,000	260,000
홍 콩	39,800	48,622	124,300	106,988	164,100	155,610
독 일	72,008	87,160	48,050	52,803	120,058	139,963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3, P. 13.

35) 중국의 뒤를 이어 일본, 러시아, 이란, 홍콩, 독일 순이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이 여전히 일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총액은 6억달러에 못 미치고 있으나, 중국의 對韓國 수출총액은 50억달러에 달하여 한국이 이미 제5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수입규모면에서도 中國이 北韓의 최대 수입국인 바, 2위의 일본과 비교하여 물량면에서 거의 2배에 달하며, 北韓의 총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34.7%에 달한다. 러시아·일본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중국의 뒤를 잇고 있으며, 이란, 홍콩, 독일 순서로 이어진다.[36]

〈표 2〉에 의하면, 1992년 중·북한간 무역액이 1991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1992년도 中國의 對北韓 貿易額은 6억 9천 6백만달러로 북한 전체무역의 14.1%에서 28.2%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5억 4천 백만달러, 대북 수입액은 1억 5천 5백만달러로 중국이 3천 9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37]

중국이 1992년 북한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食糧, 原油, 鑛物資源 등이 2억 2천 2백만달러로 41.1%, 穀物이 6천 8백만달러로 12.7%로, 두 품목이 전체의 5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설탕, 면화, 제본공업제품, 화학섬유, 공업용 및

---

36) 북한의 제1의 수출시장은 일본이다. 전체 교역규모면에서는 중국이 1위지만 대중국 교역은 수입 위주이며 수출은 28%가 일본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이란, 독일, 러시아 순이다.

37)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현안레포트 93-5호, 1993. 5.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에 의하면, '92년도 북한의 무역총액은 91년보다 3.7%가 늘어난 28억 달러로 2년만에 증가하였다. 이 중 수출은 12억 9천만 달러(18.4%증가), 수입은 15억 1천만 달러(6.4% 감소)이며 대중국 수출이 81.5%가 증가했으며, 특히 대중국 철강수출이 6.2배, 대한국 수출이 54% 증가 하였다. 중국이 7억 3천만 달러 (12.4%증가), 다음으로는 일본 4억 8천만 달러, 한국이 1억 5천만 달러 순으로 북한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북한의 대한국 무역액은 전년대비 56.2%나 늘어나 주요 무역상대국중 최대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朝鮮日報」, 1993. 7. 8.

약용식물, 기계류, 電氣器機 및 부품, 시계 등이 있다.

중국의 대북한 원유수출과 관련 〈표 1 참조〉, 중국은 1991년부터 종전의 원유수출의 우호가격제를 철폐하고 原油價를 126달러, 1992년도에는 137달러로 현실화하였다.[38] 그러나,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부족으로 중국은 1992년부터 사실상 북한 석유도입액의 30%정도만 경화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곡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경화결제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39]

북한의 대러시아 原油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원유수출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中國國內 원유 수요의 급증 등의 이유로 대북 원유 수출량을 감소하고 있다.[40] 1992년도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량은 110만톤에서 1백만톤으로 약 10%정도 감소하였으며, 원유 수입액은 1억 3천 8백만달러에 달하여 1991년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0.9%, 물량기준으로는 8.7%가 감소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2년도 중국의 대북한 곡물류 수출액

---

38) 북한은 원유도입 부진으로 가중되는 에너지난을 극복키 위해 중동지역의 산유국과의 경협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12월말에 김달현 부총리는 정무원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하였으며 1993년 1월 李成大 대외경제위원장이 리비아, 예멘, 카다르를 방문하여 원유도입을 위한 북한산 무기와 광물간의 바터무역을 요구하였다.

39) 「國際問題」(서울), 1993. 7, pp. 130~33.

40) 북한의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이 1990년 50만톤에서 1991년도에는 10%에도 안되는 4만2천톤으로 급격히 감소해 산업시설의 40~50%만이 가동되고 있다. 북한이 1992년 9월까지 러시아에서 도입한 원유량은 2만5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91년 러시아의 대북한 무역대금의 경화결제 요구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원유수입량이 사실상 1/10로 줄어든 것이다. 러시아의 국제원유값의 상승요인을 제외하여 계산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원유대금의 경화결제능력이 1/10 밖에 안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은 1991년 대비 6천 9백만달러로 300%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식량부족에 따른 곡물 수입선을 1991년도 호주, 캐나다 등에서 중국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中國의 對北韓 수출품목중 면화, 섬유사, 직물, 시계 등의 수출액이 증가되었으나 화학공업제품, 펄프·종이, 기계 및 운송 설비품목 등의 수출액은 소폭 감소하였다.[41]

북한의 경제상황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정책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수출량 감축과 곡물 수출량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Korea Herald*, 1993. 6. 4, p. 7; 「每日經濟新聞」, 1993. 6. 4.

Ⅳ. 中·北韓關係 展望과 韓國의 考慮事項

1. 中·北韓關係: 持續과 變化

가. 持續 要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들로서는 한반도의 안정유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중국의 대내 정치적 고려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韓半島의 安定 維持

중국이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社會主義體制가 유지되도록 측면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됨으로써 대외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 중국은 접경국 북한에서 정치·경제적 혼란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내 經濟建設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北韓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대남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능한한 억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만일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이 가중되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남한에 대해 무력행동도 불사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대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의 돌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될수록 中國은 周邊環境의 安定을 희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70년대말부터 중국이 경제발전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선택한 이후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 對話와 協商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지지하여왔다. 또한 중국은 한·소수교이후 심화되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한반도 안정유지에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미·북한, 일·북한 관계개선을 미국과 일본에게 일관되게 촉구하여 왔다. 중국은 남·북한간 相互實體認定 없이는 한반도 안정이 지속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남·북한 유엔가입을 지지한 바 있다. 중국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자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셋째, 중국이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반대하여온 것은 급격한 통일로 인한 불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남·북한 政治體制의 實體를 전제하고 있어 한반도 현상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어느 一方에 의한 他方의 흡수에 의해서 보다는 우선 남북한간 신뢰기반을 축적하고 漸進的으로 통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2) 對北韓 影響力 維持

중국은 북한과 政治的 紐帶關係를 지속하고 經濟援助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여 왔다. 중국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미·러 등 강대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하고, 북한과 定期的인 고위급 사절단 교환 및 제한적 경제지원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영향력 유지는 꾀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대북 영향력 유지·행사를 위해 북한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군사무기를 제공하고 북한군부와의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3) 對內 政治的 考慮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북한과 중국의 保守派들은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입장에서 양국간 理念上의 團結과 傳統的 紐帶를 강조하여 왔다. 향후 중국에서 개혁정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保守派가 得勢할 경우 중국과 북한간 정치·경제적 유대관계가 더욱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안정이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正當性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내 韓國

戰 參戰 군부지도자 등 보수파들이 대북한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와 북한간 유대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92년 10월 제14차 黨大會와 1993년 3월 제8期 全人大에서 중국지도체제가 江澤民-李鵬체제로 확정되었으나 鄧小平 死亡으로 인한 중국지도층의 權力鬪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지도층내 개혁파나 보수파들이 權力移讓期에 사회주의체제 固守의 이념적 단결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북한간 급격한 관계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나. 變化 要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變化시키도록 誘導하는 要因으로서는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 北韓의 戰略的 重要性의 相對的 減少, 韓·中 關係改善 등을 들 수 있다.

(1)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

1990년대 중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리한 周邊環境 조성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몰락의 최대 이유가 그들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하였다고 지적할 정도로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있다.[42] 이에 따라, 중국은 선진 경제국들로부터 科學·技

42) Yang Qixian, *Chin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in the 1990s* (Beijing, PRC: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4(April 1993).

術·資本의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도입을 추진하는데 정책의 중요성을 두어왔다.

소련 붕괴이후 중국은 改革과 開放의 심화를 통한 경제발전 추진노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제14차 당대회를 통해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전면적으로 導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내 人權狀況 개선 등을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이 1993년 5월 대중국 最惠國대우 부여를 1년간 연장하기로 입장을 표명하자 중국이 반체제인사 徐立文을 12년만에 석방한 것은 좋은 예이다.[43]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對臺灣 F-16 전투기 150대 판매결정에 대한 중국 보복조치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에서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우선이라는 政策的 考慮로 보복조치를 강력히 취하지 않은 것이다.[44]

---

43) 서입문은 5월 26일 전격적으로 석방된 것이다. 그의 형량은 아직도 3년을 남기고 있다. 「한국일보」, 1993. 6. 1.

44) Zhai Zhigang, "Refuting Theory of Military Balance," in *Guangming Ribao*, 1992. 10. 6. cited in *FBIS CHI*, 1992. 10. 15. pp. 9~10.; 그러나, 爭鳴誌는 대미정책에 있어 중국의 '비둘기派'(改革派)가 '매派'(保守派)보다 영향력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개혁파는 클린톤의 대통령職 당선보다 부시 미대통령의 대통령 再選을 선호하여 부시 미대통령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여 부시 대통령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in *FBIS CHI*, 1992. 10. 15, pp. 5~6; 중국이 대미 무역수출이 자국의 전체수출의 25%를 점하고 있는 점을 중시, 대미 무역흑자에 어떤 형태든 차질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改革·開放政策을 심화할수록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 특히,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한관계는 實利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2) 北韓의 戰略的 重要性 減少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북한에게 있어서 공동의 敵이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이 가지는 戰略的 重要性이 相對的으로 減少되게 되었다. 중국은 현 국제상황이 중국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이후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人權問題와 무기수출문제 등을 이유로 「화평연변」정책을 취함으로써 중·미관계가 다소 마찰을 빚고 있으나, 상대방이 모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미관계가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가 증진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위협도 크게 감소되었다.[45] 아울러 중국은 여타 선진국보다도 일본과

45) "China's Buying Spre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3. 7. 8, pp. 24~26; 러시아 외무부는 1993년도 외교정책기조를 설정함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증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

의 경제협력을 가장 중시하여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46] 이외에도 중국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을 敵對國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善隣國家로 보고 있다.

상기 사실들은 1980년대 중반이래 중국이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최근까지 중·미관계 악화속에서도 중·북한 안보관계가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온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러, 중·러, 중·미관계 등의 요인을 대북한관계에 더 이상 중요하게 連繫시키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보다는 단순한 善隣關係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3) 韓·中 關係改善

1992년 8월 韓·中修交는 천안문사태 이후 이념적으로 중국과 社會主義 連帶性을 강화해 온 북한에게 韓·蘇修交때 보다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1993년 5월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기권한 것 역시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지하여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려는 기도는 저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인테르팍스통신」, 1992. 12. 1. *Xinhua*, 1992. 12. 1 in *FBIS CHI*, 1992. 12. 2.

46) 杜攻, "世界進入了格局轉換的新時期,"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 7.

반면 한·중수교이후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왔다. 한·중수교로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군사관계 발전 보다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日本의 政治·軍事的 役割增大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 안보유지에 대한 多者間 協議에의 參與를 勸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韓·中修交로 한국의 對中 무역 및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한·중 무역액이 1991년 44억달러, 1992년 86억달러에서 1993년에는 100억달러로 急增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형태가 노동집약 부문에서 기술 및 플랜트 부문으로 擴散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양국간 안보상의 공동인식이 확대됨에[47]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안보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4) 北韓과의 理念的 紐帶關係 弱化

중국은 1980년대 후반 中·蘇關係 正常化 추진이후 사회주의

47) 한·중수교이후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訪韓인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의 방문(1993. 5)을 계기로 쌍방관계 및 다자간 관계에 대한 협의로 큰 성과가 있었다. 양국은 航空管制 移讓點 등에 대한 쌍방간의 異見으로 항공협정은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빠른 시일내에 부산, 심양 및 廣州에 각각 총영사관을 교환·설치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안보협력문제의 공식적 논의 등 안보협의를 지속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每日經濟新聞」, 1993. 5. 29, p. 2.

국가들과의 이념적 유대관계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더욱이 소련 붕괴와 러시아의 공산주의 체제 포기 이후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계급투쟁을 더 이상 대외정책 노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중국이 韓·中修交 이전부터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지지하였는 바, 이 점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이념요인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제14차 당대회이후 중국지도층의 개편으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지지하는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實利的이고 實用的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북한관계에서도 보다 실리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과의 '反帝' 투쟁을 위한 紐帶를 공고히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북한관계에 있어서 이념적 요인은 象徵的인 의미만 가지게 될 것이다.

2. 中·北韓關係 展望

이상 분석한 바를 토대로 하여 볼 때, 中國의 對北韓政策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의 경제난 가중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점차 증

대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을 止揚하고 북한을 國際社會에 參與하도록 설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미·러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쌍무적이며 강대국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변방국과의 善隣友好關係 유지차원에서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中·蘇·北韓 三角體制 속에서 나타난 中·蘇紛爭에 대한 단순한 對應的인 (responsive) 정책에서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한 目標志向的인(assertive) 정책으로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해서 북한과의 최소한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지지입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이 安保的 國家利益보다 經濟的 利益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북한 관계에서 短期的으로는 持續要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나, 長期的으로는 經濟的 實利에 따른 변화요인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短期的으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에게 경제지원을 계속하면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군사동맹관계를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韓半島 現狀維持를 위해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독일식의 흡수통일 방식을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美·北韓 關

係改善과 日·北韓修交 요구 및 韓半島非核化 등을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당사자간 협상이 決裂될 경우,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기권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와 관련, 중국은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단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武力 介入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측에 경제난 해결이 급선무임을 주지시키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불안요소 제거 및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안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역내 강국의 개입이 없는 한 남북한간의 合意에 의한 통일방식을 지지할 것이나, 현 상황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혼란을 우려하여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간 한반도통일 실현을 위한 토론이 구체화될 때,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견지를 위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多者間 安保協議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48]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통일 과정 및 한반도통

48) Ji Guoxing, *Post-Cold-War Pacific Asia: A Chinese Perspective*, p. 13. 중국은 역내분쟁의 해결이 강대국 위주에서 아시아국가들 위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강대국들과 함께 다자적 해결에 참여해

일 실현이후 통일한국의 위상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한반도 통일시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3. 韓國의 考慮事項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中國의 對北韓政策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한국이 취하여야 할 政策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은 中·美關係의 진전에 구애 받지 않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造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對中外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서로 영향을 維持·擴大하려 하고 있고, 人權問題, 무기수출문제 및 무역역조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양국간 갈등이 폭발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미관계 변화와 관계없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내 親韓派 지도자들과의 교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나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多者間 安保協力體制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캄보디아문제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바 있으며, 또한 1991년 7월 인도네시아의 스푸라틀리군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방식과 아세안확대장관회의(ASEAN-Post-Ministerial Conference)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중국 개혁파들의 정책결정이 크게 작용한 점을 유의하여 중국 改革派와의 紐帶關係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군부와의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고 중국 군부내 보수파들의 대한국 인식이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이데올르기적 연대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과 여러 분야의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군사기술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통일 이후 미군의 한반도 駐屯에 대한 지지 언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핵문제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短期的으로 한국은 북한의 IAEA 특별 핵사찰 수용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協商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중국에게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核透明性 보장과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지속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보류 등이 연계되어 있음을 중국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IAEA에 의한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하여 북한의 核透明性이 보장될 경우에 대비, 한국은 대북한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한·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한국은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과 연계하여 중국이 중·북한 동맹조약중 중국의 自動軍事介入 의무

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와 관련, 한국의 대중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 공동합작 및 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相互補完性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한·중간 경협확대를 위해서 한국은 중국 개혁파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보수파들과도 정보교환 및 한국방문 초청 등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중국의 동북부지역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北韓進出의 교두보로 삼아 대북경협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곡물류 등을 북한에게 지원하는 대신에 북한의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분야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개발사업 등 多者間 協力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牽制하고 한국의 대북한 영향력 구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국은 北韓의 改革과 開放 誘導를 위해 북한의 외환사정 등 經濟難을 고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및 차관 등을 제공하고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삼국들과 함께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방현안 레포트 93-5호. 1993. 5.

統一院. 「統一白書 1992」.

Guoxing, Ji. *Post-Cold-War Pacific Asia: A Chinese Perspective.* Shanghai, PRC: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May 1992.

Swaine, Michael D. *The Military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Santa Monica: RAND, 1992.

Yang Qixian. *Chin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in the 1990s.* Beijing,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1993.

2. 논 문

安秉俊. "韓·中修交 1年의 回顧와 展望." 「中國硏究」 제1권 3호, 1992.

江澤民. "江澤民在中共14大的報告." 「文匯報」. 1992. 10. 21.

杜攻. "對轉換中的世界格局的幾點看法." 「國際問題硏究」(北京). 第4期, 1991年.

_____. "世界進入了格局轉換的新時期." 杜攻 主編. 「轉換中的

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李鵬.「政府工作報告」. 全人大 第8期. 1993. 3.
周煦. "「十四大」後的中共外交政策: 持續與改變."「中國大陸研究」(臺北). 第36卷, 第1期. 1993年 1月.
陳小攻. "世界正處在重要的過渡時期."「世界知識」. 1992年 第1期.
平松·茂雄. "中國海軍と「中華世界」の再興."「新防衛論集」20(3). 1992. 12.
黃素庵. "世界經濟格局新變化." 杜攻 主編.「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Chen Jingbiao, "Asia-Pacific Economic Ties Grow Closer." *Beijing Review.* February 8/14, 1993.
Chen, Qimao.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XXXIII, No. 3, March 1993.
Shambaugh, David.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vial.* Summer 1992.

3. 기 타

「내외통신」.
「북한동향」.
「世界日報」.
「中央日報」.

「朝鮮日報」.

「한국일보」.

「鏡報」.

「文匯報」.

「人民日報」.

「國際問題」.

「每日經濟新聞」.

Beijing Review.

CRS Report for Congres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BIS CHI.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Korea Herald.

Time.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硏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硏究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의 展開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統一情勢分析 94-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4년 2월 일
發行日 1994년 2월 일